

(별첨)



조사 · 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

2015. 8. 27.

예금보험공사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조사 · 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	2
1. 기본적 조사 · 공동검사 틀의 변화	3
가. 사전 부실예방에 중점을 둔 조사 · 공동검사 추진	3
나.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	4
다. 사전적 서면 분석 강화	5
2. 금융회사 부담완화	6
가. 위험도에 따른 조사 · 공동검사 기간 단축 운영	6
나. 공유 자료의 우선 활용 등 수검자료 작성 부담 최소화	7
다. 분리통보제 활성화를 통한 조사 · 공동검사 결과 처리기간 단축	8
라.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원칙의 확립	9
3. 금융회사 권익보호 및 소통 강화	10
가. 권익보호담당역 확충 등 권익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..	10
나. 사외이사 면담 확대 등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	11
다.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진술권 강화	12
라. 시정조치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..	13
마. 청렴교육 강화	14
III. 향후 추진계획	15
[첨부] 조사 · 공동검사 방식 개선 및 효율화 방안(도표)	16

I. 추진 배경

- (그동안의 노력) 예보는 기금관리자로서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사 및 공동검사 등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
 - 금감원과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및 공동검사 MOU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
 -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 및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금융회사가 느끼는 부담감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·개선해왔음

<참고> 그 간의 주요 제도 보완·개선 노력

조사 및 공동검사의 틀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금감원과 공동검사 MOU 체결('03년) ▶ 리스크 감축 유도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서비스('03년) ▶ 예보의 리스크감시 역량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('13년) ▶ 사전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분석역량제고프로그램 운영('15년) ▶ 금융회사 자율 시정 및 개선 유도('15년)
금융회사 부담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MOU 체결('04년 체결, '09년 확대 체결) ▶ 현장확인 관련 비용(통신비 등)의 예보 부담('12년) ▶ 금감원과 단일 검사반 및 검사장 사용, 대형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주기조정(매년→2년 1회) 등 금융기관 부담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MOU 개정('14년 개정) ▶ 조사공동검사 의견서 교부('15년)
권익보호 및 소통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금융회사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보호담당역제 운영('12년) ▶ 부패 방지를 위한 사전 청렴교육제 운영('14년)

- (개선 필요성)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가 금감원과 중복되어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 상존
 - 또한, 저축은행 사태, 동양 사태 등을 거치면서 부실 사전 예방을 위한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 실효성 제고 필요성 제기
 - 아울러, 최근 감독당국이 발표한 「검사·제재 개혁 방안」에 상응하여,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 업무관행을 재점검 하고,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

II. 조사·공동검사 관행 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

기본 방향

① 기본적인 조사·공동검사 틀의 변화

- 경영전반·준법성 검사에서 탈피하여 사전부실예방을 위한 보험사고 위험요인 파악에 역량 집중
- 단순 위법·위규 사항 지적은 지양
- 금융회사의 자율적 시정 및 개선 유도에 초점

②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

- 수검 자료의 정형화, 최소화 노력
- 점검자 편의 위주의 업무관행을 수검자 위주로 개선

③ 금융회사 소통 및 권익보호 강화

-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 강화
- 검사원의 부정·부패 및 권한 남용 방지 노력 지속
- 금융회사 소통채널 강화를 통한 점검 결과 수용성 제고

1 기본적 조사 · 공동검사 틀의 변화

가. 「사전 부실예방」에 중점을 둔 조사 · 공동검사 추진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☐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조사 · 공동검사 시 금융회사 부실화 가능성 및 보험사고의 위험성 점점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나,
 - 여전히 경영전반 · 준법성 위주의 검사로, 리스크 감시를 통한 기금 손실 예방이라는 예보의 현장확인 목적 달성에는 한계
 - 또한 금융현장에서는 예보의 조사 · 공동검사 결과가 금감원과 유사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을 초래한다는 문제제기 지속

(2) 개선 방안

- ☐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'사전 부실예방'에 중점을 둔 점검 추진
 - 경영전반 · 준법성 점검에서 탈피하여 기금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사고* 위험요인** 파악에 검사 역량을 집중
 - *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, 영업인허가 취소, 해산·파산 등(예보법 제2조제7호)
 - ** 보험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·자산운용 행태 등(ex.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사례, 저축은행의 PF대출 쏠림현상)
- ☐ 예보의 조사 · 공동검사 목적 등에 대한 충실한 사전 설명 등 대 · 내외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

나.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☐ 예보는 시정조치 요청권이 부여*된 이후, 시정조치 필요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
 - * (공동검사) '12년 금융위 설치법 개정, (공동검사·조사) '14년 예보법 개정
 - 그러나 자율시정이 가능한 사항까지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율 · 책임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정책방향에 배치

참 고 최근 3년간 조사 및 공동검사 후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현황

구 분	'12년	'13년	'14년	합계
공동검사	55건	125건	95건	275건
단독조사	-	-	99건	99건

* 공동검사에 대한 금감원 앞 시정조치 요청권은 '12.3월(금융위설치법), 단독조사시 금감원 앞 시정조치 요청권은 '14.5월(예보법) 도입

(2) 개선 방안

- ☐ 경미한 위규사항 등 자율적인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 요청을 통한 개선보다는 현장에서 자율시정을 유도
 - 시정조치 요청은 중대한 사항*의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
 - * BIS 비율 급락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, 거액의 차·도명 대출 취급 등

사 례 ○○ 저축은행 단독조사 사례

- ◆ 점검기간 : '14.11월
- ◆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(시정조치 요청 대신 현장개선 유도)
 - 유동성 비율 미준수(일시적으로 100% 미만) → 현장개선(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강화)

다. 사전적 서면 분석 강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□ 저금리 지속, 시스템리스크 규제 강화* 및 보험업권 IFRS 4 2단계 시행 등 금융업권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

* 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(SIFI) 선정, 사전정리계획(RRP) 제도 도입, 사전 손실부담안(Bail-In) 등

○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과 조사·공동검사 간 연계성이 낮아 금감원 등과 차별화된 점검 결과 도출이 어려움

(2) 개선 방안

① 리스크 요인 사전분석과 조사·공동검사의 연계 강화

- 부실화 및 기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업권별 핵심 리스크 요인 및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실시
- 현장확인시 사전 분석 결과 발견된 문제점 위주로 집중 점검

② 핵심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역량 강화

- 내부 분석역량강화프로그램* 운영, 외부 전문가 교류 확대 (업권별 포럼 운영) 등을 통해 주요 이슈 파악 강화

* 업권별 주요 이슈 및 개별 금융회사 분석·보고 실시(주 1회)

- 전문인력(박사, 애널리스트 등) 확충*, 직무전문가 확대 운영**, 대·내외 연수 내실화 등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 지속 제고

* (현행) 사전분석 전문인력 1명 → (개선) '15.6월 현재 3명(추가 확대 예정)

** 5년 이상 직무전문가 확대 운영 (현행) 3명 → (개선) 5~6명 수준

2 금융회사 부담완화

가. 위험도에 따른 조사·공동검사 기간 단축 운영

(1) 현황 및 문제점

□ 예보는 관련 법령 및 공동검사 MOU에 의거하여 엄격한 요건에 따라 조사·공동검사 업무를 실시*

* 저축은행업권 제외시 조사·공동검사 비율은 연간 2% 미만(3~4개사/부보 금융기관 220개사)

○ 그럼에도 최근 금감원의 현장검사 축소방침, 저축은행 등의 수검부담 완화 건의 등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 최소화 요구 증대

참 고 최근 3년간 업권별 조사 및 공동검사 업무 실시 현황						
	구 분	'12년	'13년	'14년	'15.3월말	합계
	소 계	9	18	9	1	37
공동검사	은행	-	1	1	-	2
	보험	2	2	1	-	5
	금융투자	1	1	1	-	3
	저축은행	6	14	6	1	27
단독조사	저축은행	8	11	17	2	38
합계	-	17	29	26	3	75

(2) 개선 방안

□ 조사·공동검사 대상 선정기준이 관련 법령과 MOU에 정해져 있어 임의적인 점검 대상 축소는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,

○ 사전 분석을 통해 파악된 보험사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현장확인 기간을 단축운영(공동검사의 경우, 금감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)

* (현행) 평균 3주 내외 → (개선)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2주 내외

나. 공유 자료의 우선활용 등 수검자료 작성 부담 최소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□ 공동검사의 경우, 금감원을 통한 사전 일괄 자료요청, 자료의 공유 등 금융회사 부담 축소를 위한 장치 旣 마련

- 단독조사의 경우, 예보의 시정조치 요청 후 동 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추가 확인검사로 금융회사의 이중수검 부담* 발생

* 금융위 현장방문시 저축은행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

(2) 개선 방안

① 공유 정보 등의 우선사용 및 추가 요청자료 최소화

- 조사시 금감원과 공유·공시 자료*를 최대한 활용

* 여신건전성 점검시 금감원과 공유하는 여신상시감시자료를 우선 활용

- 요청자료 서식은 금감원 검사 서식과 통일(금감원 검사매뉴얼) 하고, 점검기간 중 자료요청은 최소화

② 금감원에 송부하는 예보의 지적사항별 증빙자료 정형화

-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업권별 시정조치 요청사항 유형별로 금감원이 필요로 하는 증빙자료의 종류, 서식 등을 정형화*

* 금감원이 중복·장기간의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정도의 자료요구수준

→ 금감원의 추가 검사로 인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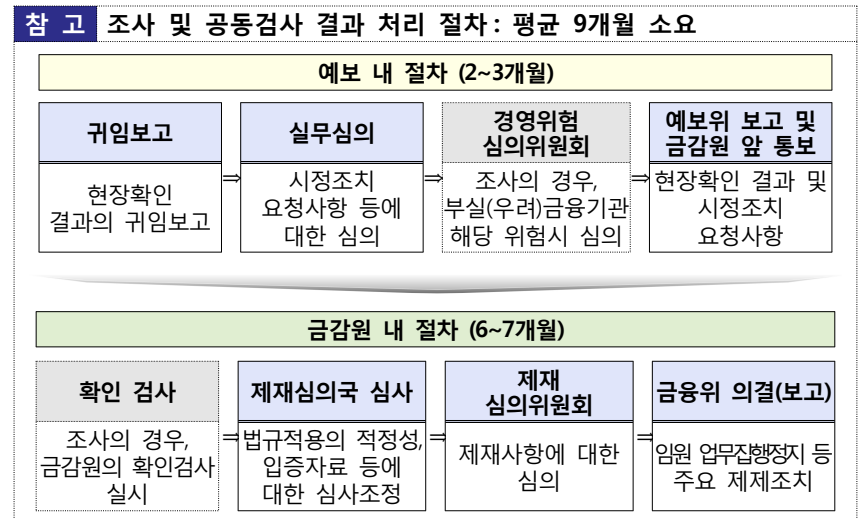
다. 분리통보제 활성화를 통한 조사·공동검사 결과 처리기간 단축

(1) 현황 및 문제점

□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 결과가 금감원 내 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에 최종 통보되기까지 평균 9개월의 장기간이 소요

* 예보는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경우(조사·공동검사 종료 후 평균 2~3개월 이내) 금융회사에 동 내용을 참고용으로 통보

- 처리결과 장기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개선조치가 지연 또는 실기 우려가 있으며, 금융회사 임직원의 심리적 불안감 장기화 지속



(2) 개선방안

□ 경영개선을 위해 신속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*, 결과 확정 이전에 해당 건을 분리하여 통보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를 활성화 ('14년 공동검사 MOU에 기 반영)

* (ex.) 채권회수가액 감소 방지를 위한 신속한 채권보전조치 실시 등

** 통보 소요기간 단축: (현행) 평균 9개월 → (개선) 평균 4~5개월 예상

라.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원칙의 확립

(1) 현황 및 문제점

□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**확인서·문답서 징구**가 금융회사 임직원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중

- 기재내용에 관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측의 **이견**이 존재하는 경우 불필요한 마찰 야기 및 조사·공동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

참 고 관련규정상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 사유

- ◆ 확인서 :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게 하는 경우
- ◆ 문답서 : 확인서에 따라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사실확인에 있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관련자의 답변을 듣고자하는 경우

(2) 개선 방안

①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원칙 확립

- 지적사항에 대한 **입증책임이 조사(검사)원에 있음**을 명확히 하고, 기안문서,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 확립

② 확인서 등 관련 규정 정비

- '15년 초부터 既 시행 중인 확인서·문답서 미징구 원칙을 규정에 명시
- 객관적 증빙 자료로 **확인되지 않는 사항**의 경우, 점검반장 명의의 **의견서를 교부**하고, 해당 금융기관에 **의견진술 기회***를 부여

*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, 반대증거의 제시권리 등을 사전 설명

3

금융회사 권익보호 및 소통 강화

가. 권익보호담당역 확충 등 권익보호제도 실효성 제고

(1) 현황 및 문제점

□ 예보는 '12년부터 **사내변호사**를 권익보호담당역으로 지정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익보호제도를 운영

- 조사·공동검사 시 대상 금융회사에 **동 제도를 안내**하고 있으나, **실제 신청사례가 전무**

참 고 권익보호제도 개요

- ◆ **의의** : 조사 및 공동검사 대상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점검 실시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조사 등이 진행되거나,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있는 경우 예보의 권익보호담당역(사내 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)에게 권익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
- ◆ 권익보호담당역의 **역할** : 조사 및 공동검사 기간 중 권익보호제도에 대한 안내, 권익보호신청 사항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점검의 중지 또는 시정요청 등

(2) 개선 방안

□ 권익보호담당역을 **확충**(현재 1인 → 2인 이상)하고, **모든 조사·공동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방문·안내 실시**

* '14년 34% (9개사/26개사) 방문안내 → '15년부터 100% 방문안내 실시

□ 감사실의 암행감찰 및 피검기관 임직원 면담/설문조사 등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권익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

나. 사외이사 면담 확대 등 대상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□ 조사·공동검사 기간 중 담당부서장 등이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**의견청취제**도를 시행중에 있으나,

* 통상 점검 개시 및 종료시 1~2회 임의 실시

- 점검기간 중 **소통노력이 부족**하고, **금융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다**는 불만 사항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

(2) 개선 방안

① 조사·공동검사 기간 중 「수시 간담회」 개최

- 충분한 의견 교환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점검기간 중 조사·공동검사 반장과 해당 금융회사 감사 등과의 간담회**를 의무화*

* 점검 진행상황 및 발견된 문제점을 설명하여 점검기간 중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반론기회를 부여

② 조사·공동검사 종료 이후 「사외이사 면담」 실시

- 조사·공동검사 종료 이후 주요 임직원 뿐 아니라 **사외이사**에게도 점검 결과 설명,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**건전한 내부통제**를 유도

* 공동검사의 경우, 금감원 면담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, 기존 경영진 면담 등은 유지

다.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진술권 강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□ 금융회사가 조사·공동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, 이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**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**한 실정

- (조사) 서면(전산시스템)에 의한 의견 접수 원칙

* 실무적으로는 면담 및 유선통화에 의한 방식도 활용되고 있음

- (공동검사) 의견 전달 관련 규정 미비

참 고 금융회사 의견 진술 제도 유사 사례

◆ 예금보험공사 MOU 심의위원회

: MOU 심의위원회에 당해 금융기관 관련 임직원 및 그 밖에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(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)

◆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

: 제재심의위원회에 당해 금융기관의 장, 관련 임직원, 기타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(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7조)

(2) 개선 방안

① 금융회사의 의견 진술권 강화

- 금융회사가 희망할 경우, **조사·공동검사 결과 심의과정**에서 출석하여 **의견을 진술** 또는 **서면 의견을 제시**할 수 있도록 허용

② 「결과 진행상황 통지제도」 도입

- 조사·공동검사 완료 후 **내부 절차의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***를 해당 금융회사에 **통보**하는 제도 도입

* 시정조치 요청사항의 심의회 상정 사실 및 의견 진술권 안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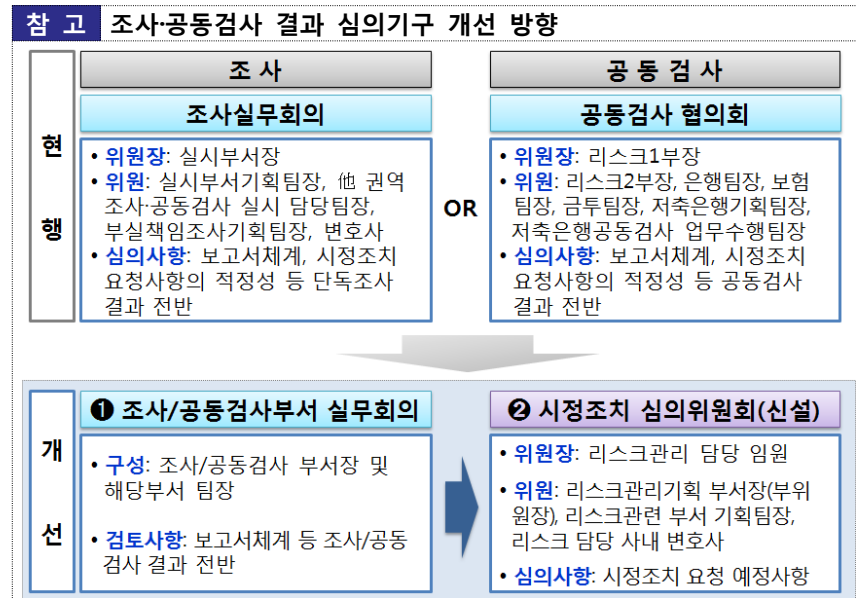
라. 「시정조치 심의위원회」 설치를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조사·공동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하여 **실시부서에서 각각의 심의를 진행**하고 있어 심의결과의 객관성·공정성 확보에 한계
 - 특히 '14년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 신설을 감안할 때, 대외 파급효과가 큰 시정조치 요청사항의 심의 강화 필요성 증대

(2) 개선 방안

- **실시부서와 독립된 심의기구**로써 「시정조치 심의위원회」를 설치하여, 보다 객관적 심의 실시
 - 아울러 그 실질이 동일한 **조사·공동검사의 결과 심의절차를 일원화**하여 결과처리의 효율성 제고



마. 청렴교육 강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예보는 조사·공동검사이시 감사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전 청렴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을 시행 중
 - 이러한 노력으로 그간 부정·부패 사례는 없었으나, **조사·공동검사의 특성(대면접촉)**을 감안하여 **청렴도 제고방안을 더욱 강화**할 필요



(2) 개선 방안

- **청렴 교육 및 사적 이해관계고지** 등을 **규정에 명시**하여 청렴도 제고 노력을 강화
 - * 실시부서장 재량으로 점검 착수전 1회 교육 → 규정으로 의무화하여 점검착수 전에는 부서장이 1회 이상, 점검 중은 점검반장이 수시 실시
- **청렴의무 위반자에**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**징계조치***를 **철저히** 이행하고, **현장확인 업무**에서 원칙적으로 **배제(One Strike Out)**
 - * 비위 유형에 따라 징계를 취하되,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·부당 처분시 금액 불문 면직 처리
- 청렴교육 교재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지속적으로 실시

Ⅲ. 향후 추진계획

주요 추진업무	시행 시기
1. 기본적 조사 및 공동검사 틀의 변환	
□ 사전 부실예방에 중점을 둔 조사 및 공동검사 추진	지속 추진
□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	지속 추진
□ 사전적 서면 분석 강화	지속 추진
2. 금융회사 부담완화	
□ 위험도에 따른 조사 및 공동검사 기간의 단축 운영	'15년 하반기
□ 공유 자료의 우선 활용 등 수검자료 작성 부담 최소화	지속 추진
□ 분리통보제 활성화를 통한 조사 및 공동검사 결과 처리 기간 단축	'15년 하반기 (금감원협조필요)
3. 금융회사 권익 보호 및 소통 강화	
□ 권익보호담당역 확충 등 권익보호제도 실효성 강화	기시행('15.6)
□ 사외이사 면담 확대 등 대상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	'15.9월 시행
□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진술권 강화	'15.9월 시행
□ 시정조치 심의위원회 설치	'15.9월 시행
□ 청렴 교육 절차 등 규정화	'15.9월 시행

<첨부>

조사 · 공동검사 방식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주요내용

	종 전	개선 방안
조사 및 공동검사 틀의 변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영사항전반 포괄적 점검 • 외부 위험요인 분석 및 현장확인 연계 미흡 • 금감원 앞 시정조치 요청을 통한 개선 유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 부실예방에 중점을 둔 점검 • 위험요인 사전 분석 강화 • 금융회사의 자발적 개선 유도
금융회사 부담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확인 전 수검자료 일괄 요구 • 자산규모 등 외형에 따른 점검기간 설정 • 관행적 확인서·문답서 징구 ('15년초 폐지) • 예보 단독조사 후 금감원 확인검사 • 조사 및 공동검사 결과의 일괄 통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감원 공유정보 및 공시 정보 우선 활용 • 보험사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점검기간 단축 • 확인서 · 문답서 대신 조사·공동검사 의견서 교부 -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원칙 확립 • 금감원협의를 통해 지적사항별 증빙자료를 정형화하여 확인검사 부담 완화 • 시급한 시정필요사항의 분리통보 실시
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및 소통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시부서장 재량의 청렴 교육 • 권익보호담당역 1인 운영 - 서면 또는 현장방문선택 • 점검기간 중 상근 임직원 위주의 비정기적 면담 • 서면 위주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• 결과 확정 후 통보 • 조사·공동검사 실시부서의 결과 심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점검예절/청렴교육 의무화 · 규정화 • 권익보호담당역 및 담당직원 확충 - 원칙적 현장방문 실시 • 점검기간 중 임직원 수시간담회 개최 및 사외이사 면담 실시 • 심의시 출석 · 서면의견 진술 가능 • 결과 진행사항 통지제도 도입 • 실시부서와 독립된 결과심의 제도 도입